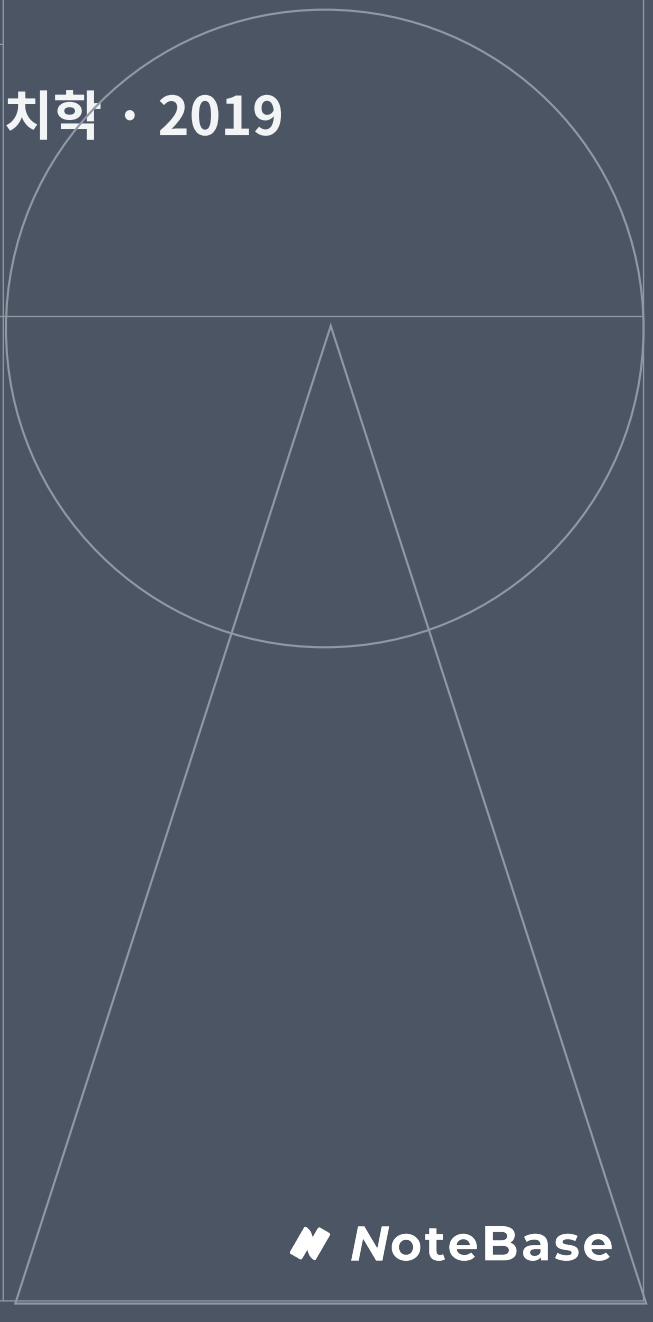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9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9

문 1. '공유지의 비극'을 환경 문제에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경 문제는 배제적이고 경합적이므로 자유 경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다.

② 환경 문제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공공재에서만 발생한다.

③ 환경 문제는 비배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협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④ 환경 문제는 비경합적인 클럽재이므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경 문제를 공공재·공유자원 관점에서 볼 때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어떻게 집단행동 문제를 만드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재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재화이다.
환경 문제는 대체로 누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와 협력 실패가 나타나며, 자원 이용 측면에서는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설명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환경 문제를 설명하는 핵심은 배제성이 아니라 비배제성이다. 누구나 이용하거나 오염의 영향을 주고받기 쉬워 비용을 특정 행위자에게만 완전히 떠넘기기 어렵다.
틀린 부분은 "배제적이고 경합적"이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환경 문제는 대체로 비배제적 성격을 띠며, 공유자원 문제에서는 경합성이 함께 나타난다.

② X
환경 문제는 비배제성과 관련되지만 비경합적인 공공재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대기, 바다, 어장처럼 비배제적이면서 경합적인 공유자원에서도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틀린 부분은 "공공재에서만"이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환경 문제는 공공재뿐 아니라 공유자원에서도 발생한다.

③ O
환경 문제는 비배제적 성격 때문에 무임승차 유인이 크다. 각 행위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도 편익은 모두가 함께 누리므로 자발적 협력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④ X
클럽재는 배제적이지만 비경합적인 재화인데, 환경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 환경 문제의 핵심은 비배제성 때문에 공동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틀린 부분은 "비경합적인 클럽재"라는 규정이다. 올바르게는 환경 문제는 공공재 또는 공유자원 성격과 연결되며, 기술·재정 지원은 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모두 비배제적 재화로 묶어 두고 경합성 여부를 놓치면 ②와 ③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②는 "공공재에서만"이라고 범위를 과도하게 좁힌 것이 함정이고, ④는 클럽재라는 전혀 다른 재화 유형을 섞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경 문제 선지가 나오면 먼저 배제 가능 여부와 경합성 여부를 나눠 본다. 비배제적이라서 무임승차가 생긴다는 설명은 맞는 방향이고, 이를 공공재에만 한정하거나 클럽재로 바꾸면 틀린 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환경 문제는 비배제성 때문에 협력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공유자원의 비극은 비배제성+경합성의 결합으로 이해한다.

NoteBase

문 2. 지역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공고화 및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의 경쟁 종식 등 정치적 목적도 추구하였다.

②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신뢰구축, 예방외교 확대, 역내 분쟁에 대한 효과적 접근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였다.

③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중국,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구축과 함께 테러, 마약, 무기밀매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추구하였다.

④ 유럽연합(EU)은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과정에서 리스본 조약을 채택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역주의 기구별 성격, 구성국, 기능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역주의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경제·안보·정치 목적을 위해 제도화된 협력체를 만드는 흐름이다.
MERCOSUR는 남미의 경제통합을 기본으로 하되 민주주의 공고화 같은 정치적 목적도 함께 지닌다.
AR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중심으로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는 안보 대화체이다.
SCO는 중국·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유라시아 협력기구로, 테러·분리주의·극단주의 대응과 안보협력이 핵심이다.
EU의 리스본 조약은 유럽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혁의 성격을 가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MERCOSUR는 단순한 자유무역 협력체를 넘어 민주주의 공고화와 역내 정치 안정에도 의미를 두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쟁 완화와 협력 제도화라는 정치적 효과도 함께 추구하였으므로 옳다.

② O
ARF는 신뢰구축 조치에서 출발하여 예방외교로 발전하려는 구상을 가진 역내 안보 포럼이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분쟁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모색한다는 설명은 ARF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중국,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이다. SCO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출범한 기구이지 동남아 국가들로 구성된 기구가 아니다. 테러, 마약, 무기밀매 등 초국경 안보 영역에서 협력을 추구한다는 뒤 문장은 맞지만, 구성국 설명이 틀렸으므로 선지 전체는 틀리다.

④ O
리스본 조약은 EU의 제도 개혁을 통해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3번은 SCO의 기능 설명 일부를 맞게 써 두고 구성국만 ASEAN 계열 국가처럼 바꿔 놓은 함정이다. 수험생이 안보협력 기능만 보고 넘어가면 지역 범위를 검토하지 못해 오답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주의 문제는 먼저 기구의 활동 공간이 남미인지, 유라시아인지, 아시아·태평양인지, 유럽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경제통합체인지, 안보 포럼인지, 초국가적 통합체인지 핵심 기능을 대조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MERCOSUR는 남미 경제통합, ARF는 아태 안보대화, SCO는 중·러+중앙아시아 안보협력, EU 리스본 조약은 의회 권한 강화와 제도 효율화이다.

NoteBase

문 3.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라인란트 재무장
ㄴ. 일본-소련 중립조약 체결
ㄷ. 뮌헨협정 체결
ㄹ. 독일-소련 불가침조약 체결

① ㄱ→ㄷ→ㄹ→ㄴ
② ㄱ→ㄹ→ㄷ→ㄴ
③ ㄴ→ㄹ→ㄱ→ㄷ
④ ㄹ→ㄱ→ㄷ→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주요 외교·군사 사건을 연도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ㄱ 라인란트 재무장(1936년 3월) — 독일이 베르사유 체제를 정면으로 흔든 초기 팽창 조치이다.
2. ㄷ 뮌헨협정 체결(1938년 9월) — 영국·프랑스가 독일의 주데텐란트 요구를 수용한 유화정책의 상징적 사건이다.
3. ㄹ 독일-소련 불가침조약 체결(1939년 8월) — 독일의 폴란드 침공 직전 동부전선 부담을 덜어 준 합의이다.
4. ㄴ 일본-소련 중립조약 체결(1941년 4월) — 독소전 개전 직전 일본과 소련이 상호 중립을 약속한 조약이다.

왜 이 순서인가: 라인란트 재무장 이후 독일의 팽창이 심화되어 뮌헨협정으로 이어지고, 그 뒤 전면전 직전의 독소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며, 일본-소련 중립조약은 그보다 뒤인 1941년에 성립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ㄱ(1936) → ㄷ(1938) → ㄹ(1939) → ㄴ(1941) 순서가 정확하다.
2번: X. 틀린 부분은 ㄹ을 ㄷ보다 앞에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뮌헨협정(1938년 9월)이 독일-소련 불가침조약(1939년 8월)보다 먼저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ㄴ을 가장 앞에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일본-소련 중립조약은 1941년 사건이므로 네 사건 중 가장 늦다.
4번: X. 틀린 부분은 ㄹ을 ㄱ보다 앞에 둔 점이다. 올바르게는 라인란트 재무장(1936년)이 독일-소련 불가침조약(1939년)보다 먼저이며, 전체 순서는 ㄱ → ㄷ → ㄹ → 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938년 뮌헨협정과 1939년 독일-소련 불가침조약의 선후를 뒤집거나, 일본-소련 중립조약을 전쟁 전반기의 사건으로 막연히 묶어 앞쪽에 두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형 문제는 사건을 국가별로 외우기보다 연도로 먼저 고정한 뒤, 유화정책 단계인지 전면전 직전 조정인지 전쟁 확산 이후의 외교 조정인지를 구분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라인란트 1936 → 뮌헨 1938 → 독소불가침 1939 → 일소중립 1941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4.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1992년 발효되었다.

② 바젤 협약 당사국은 유해 폐기물이 비당사국에 수출되거나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바젤 협약 당사국 간 유해 폐기물 교역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1994년 한국은 바젤 협약에 가입하였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바젤 협약의 발효 시점, 비당사국과의 교역 제한, 그리고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사전통고승인(PIC) = 유해 폐기물을 국경 밖으로 이동시키기 전에 수입국과 경유국에 미리 통보하고 서면동의를 받는 통제 방식이다.

핵심 구분

바젤 협약은 유엔의 개별 승인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관련 국가의 사전통고와 서면동의로 유해 폐기물의 월경이동을 통제하는 협약이다.
또한 당사국과 비당사국 사이의 교역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한국은 1994년에 가입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확보하려는 협약이라는 설명이 맞다. 협약은 1989년에 채택되었고 1992년 5월 5일 발효되었으므로 선지의 1992년 발효도 맞다.

② O
바젤 협약은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 수출하거나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선지는 이 비당사국 교역 금지 원칙을 묻는 것이므로 옳다.

③ X
바젤 협약 당사국 간 교역에 필요한 것은 유엔의 승인이 아니라 수입국과 경유국 등 관련국의 사전통고 후 서면동의이다.
틀린 표현: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바른 표현: "수입국과 경유국 등 관련국의 사전통고와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O
한국은 1994년에 바젤 협약에 가입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협약 발효도 1994년이므로 연도 진술은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국제기구가 직접 허가하는 체제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바젤 협약의 통제 핵심은 유엔 승인 여부가 아니라 당사국 사이의 사전통고승인 절차라는 점을 놓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경조약 선지에서는 누가 통제권을 가지는지부터 본다. 바젤 협약은 유엔의 허가제가 아니라 국가 간 사전통고와 동의에 기초한 통제제도이므로, 국제기구의 직접 승인이라고 나오면 오답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바젤 협약 = 유해 폐기물 월경이동 통제, 비당사국 교역 원칙적 금지, PIC 방식, 1992년 발효, 한국 1994년 가입이다.

NoteBase

문 5.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대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하마슐드(Dag Hammarskjöld)이다.

② 임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고 유엔 헌장은 규정하고 있다.

③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④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총회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유엔 사무총장의 지위와 권한, 총회 특별회기 소집 절차, 역대 사무총장의 순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제1대와 제2대 사무총장을 구분하고, 유엔 헌장 제99조·제100조·제20조의 기능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사무총장의 환기권 = 사무총장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권한이다.
특별회기 = 총회의 정기회기 외에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열리는 회기이다.

핵심 구분

인물 순서는 트뤼그베 리(Trygve Lie)가 제1대, 하마슐드(Dag Hammarskjöld)가 제2대이다.
유엔 헌장 제99조는 사무총장의 안보리 환기권을, 제100조는 사무총장과 직원의 독립성을, 제20조는 총회 특별회기의 소집 절차를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제1대 유엔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출신의 트뤼그베 리(Trygve Lie)이다. 하마슐드는 스웨덴 출신의 제2대 사무총장이다.
- 틀린 표현: "제1대 사무총장"
- 올바른 표현: 트뤼그베 리가 제1대이고, 하마슐드는 제2대 사무총장이다.

② O
- 유엔 헌장 제100조는 사무총장과 직원이 어떤 정부나 외부 기관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국제공무원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므로 옳다.

③ O
- 유엔 헌장 제99조에 따라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자신이 판단하는 사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환기할 수 있다. 사무총장이 안보리 의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 권한이므로 옳다.

④ O
- 유엔 헌장 제20조에 따라 총회의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요청 주체와 실제 소집 주체를 구분하면 옳은 진술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하마슐드의 국적이 스웨덴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직위를 제1대로 바꿔 놓아 인물 순서 기억의 허점을 노린다. 또 제99조, 제100조, 제20조를 모두 사무총장 관련 조항으로 섞어 두어 각각의 기능을 혼동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엔 기구 문제는 먼저 인물사와 헌장 조항을 분리해 본다. 사람·국적·순서가 나오면 역대 사무총장 순서를 확인하고, 권한 문제가 나오면 99조는 환기권, 100조는 독립성, 20조는 특별회기 소집으로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트뤼그베 리가 1대, 하마슐드가 2대이며, 99 환기권·100 독립성·20 특별회기 소집이다.

NoteBase

문 6. 원유, 금,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원의 저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천연자원의 수출 비중이 낮다.

② 소수만 부유하게 만들어 다수의 빈곤층이 생긴다.

③ 민주화는 진전되기 어렵다.

④ 자원을 둘러싼 정부, 반군, 다국적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원의 저주가 무엇이며 자원 부국에서 왜 경제 왜곡, 정치 권위주의, 분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원의 저주는 석유, 광물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이 오히려 산업구조 왜곡, 부패, 불평등, 권위주의, 내전을 낳아 장기 발전을 해치는 현상이다. 핵심 판단축은 자원이 많은가가 아니라 그 자원에 경제와 권력이 과도하게 의존하는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자원의 저주가 나타나는 국가는 해당 자원 수출 비중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경우가 많다. 자원 수출에 경제가 편중되면 제조업과 다른 산업이 약해지고 외화 수입도 자원 가격에 과도하게 좌우된다. 틀린 표현은 '수출 비중이 낮다'이고, 올바르게는 '해당 천연자원의 수출 비중이 높고 경제구조가 자원에 편중되기 쉽다'이다.
2번: O. 자원 수익이 정치권력이나 특정 엘리트에게 집중되면 소수만 부유해지고 다수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자원 부국인데도 분배가 왜곡되어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이 자원의 저주의 대표적 모습이다.
3번: O. 정부가 세금보다 자원 수입에 의존하면 시민에 대한 책임성이 약해지고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쉬워 민주화가 진전되기 어렵다. 자원 수입이 정권 유지 자금으로 쓰이면 정치개혁 압력이 약해진다.
4번: O. 자원 채굴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정부, 반군, 다국적기업 사이의 무력 충돌이나 정치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아프리카 산유국이나 광물 부국 사례에서 이런 자원 분쟁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오답 포인트

자원이 많으면 곧바로 부유해진다고 단순 연결하면 1번 같은 선지에 흔들린다. 이 개념의 핵심은 자원 보유 자체가 아니라 자원 의존도가 높아질 때 나타나는 수출 편중, 부패, 불평등, 권위주의, 분쟁의 연쇄효과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원의 저주 문제가 나오면 먼저 자원 의존도가 높아지는가를 본다. 그다음 경제에서는 산업구조 편중과 변동성, 정치에서는 부패와 민주주의 후퇴, 사회에서는 불평등과 분쟁으로 이어지는지를 연결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원 많음이 곧 발전은 아니며, 자원 의존 심화는 수출 편중, 불평등, 권위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NoteBase

문 7. 미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트루먼 행정부는 공공외교를 위하여 미국해외공보처(USIA)를 설립하였다.

② 클린턴 행정부는 USIA를 국무부 산하로 편입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였다.

③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공공외교는 세계적으로 반미 여론을 크게 완화시켰다.

④ 오바마 행정부에서 스미스-문트법(Smith-Mundt Act)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공공외교 활동이 금지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국 공공외교 제도의 변천과 각 행정부의 조치·성과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트루먼 행정부: 기반 조성 - 스미스-문트법 등을 통해 해외 정보활동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USIA 자체를 설립한 것은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 통합 - 1999년 USIA를 국무부에 편입하여 공공외교를 외교정책 체계 안으로 재배치하였다.
부시 행정부: 이미지 악화 - 9·11 이후 공공외교를 강화했지만 이라크전 등으로 세계적 반미 여론은 대체로 악화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스미스-문트 현대화 - 국내 배포 제한을 완화한 것이지 미국 거주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트루먼 행정부는 ... USIA를 설립하였다'이다. USIA는 1953년에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설립되었고, 트루먼 행정부는 그 전 단계의 정보·교류 제도 기반을 마련한 쪽에 가깝다.
② O: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제정된 외교개혁·재구조화 법에 따라 1999년 USIA를 국무부로 편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외교 기능이 국무부 체계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선지의 연결이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세계적으로 반미 여론을 크게 완화시켰다'이다. 부시 행정부 시기에는 대테러전과 이라크전의 영향으로 미국 이미지와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올바르게는 반미 여론이 완화되기보다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스미스-문트법 재정됨에 따라 ... 공공외교 활동이 금지되었다'이다. 오바마 시기의 Smith-Mundt Modernization은 오히려 기존의 국내 배포 제한을 완화한 것이며, 미국 거주 외국인 대상 활동을 금지한 조치가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트루먼 시기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아이젠하워 시기의 USIA 설립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 ③은 부시 행정부가 공공외교를 강화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여론 개선 성과로 착각하게 만든다. ④는 스미스-문트법을 '국내 선전 전면 금지법'처럼 단순화하여 법 개정 방향까지 거꾸로 읽게 만드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부-공공외교 문항은 설립 주체, 조직 편제 변화, 여론의 실제 결과, 법 개정의 방향을 분리해서 본다. USIA는 1953년 설립, 1999년 국무부 편입, 부시 시기 반미 여론 악화, 오바마 시기 Smith-Mundt 현대화는 제한 완화라는 축으로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USIA는 1953년 설립, 1999년 국무부 편입, 부시 시기 여론 악화, Smith-Mundt 현대화는 제한 완화이다.

NoteBase

문 8.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② 중국 내 2개 핵심 거점은 상하이와 티베트이고, 2개 국제 거점은 푸젠과 광저우이다.

③ 중국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④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서방 국가의 비난에 대해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협력·발전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일대일로의 추진 시점, 중국 내 핵심지역과 국제거점의 구분, AIIB와 채무함정 비판에 대한 기본 사실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아우르는 중국의 대외전략이다.
중국 내 핵심지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신장과 해상 실크로드의 푸젠으로 정리되고, 상하이와 광저우는 국제거점 또는 해상 연계 거점으로 거론된다.
AIIB는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투자 재원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금융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2013년 시진핑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방문 연설에서 각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제시하면서 일대일로가 본격화되었다.

② X
틀린 부분은 "중국 내 2개 핵심 거점은 상하이와 티베트"와 "2개 국제 거점은 푸젠과 광저우"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중국 내 핵심지역은 신장과 푸젠이고, 상하이와 광저우는 국제거점 또는 대외연계 거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 티베트는 서남 연계권역에 가깝지 핵심 2거점으로 보지 않는다.

③ O
AIIB는 중국이 주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재원을 넓히려는 구상이었고, 미국은 초기에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④ O
서방에서는 일대일로가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했지만, 중국은 이를 중국-아프리카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경로라고 반박해 왔다.

오답 포인트

②는 실제 지명들을 섞어 놓아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푸젠은 국제거점이 아니라 중국 내 해상 실크로드 핵심지역이고, 상하이·광저우는 대외연계 거점에 가깝다. 티베트도 일대일로 연계 권역에는 들어가지만 핵심 2거점으로 외우는 대상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대일로 문제는 먼저 2013년 출범 여부를 잡고, 다음으로 육상 핵심은 신장, 해상 핵심은 푸젠이라는 축을 확인하면 된다. 그다음 금융수단은 AIIB, 대표 논란은 채무함정 비판이라는 연결로 판단하면 선지 정리가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일대일로는 2013년, 육상 핵심은 신장, 해상 핵심은 푸젠, 금융은 AIIB이다.

NoteBase

문 9. 독일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프랑스 우호조약에 서명하였고, 이후 양국은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과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였다.

② 아데나워 정부는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채택하였다.

③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방정책을 실시해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④ 콜 정부는 동방정책을 폐기한다고 천명한 후 동독과의 통일을 이루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독 외교정책의 흐름을 아데나워의 서방통합, 할슈타인 원칙, 브란트의 동방정책, 콜 시기의 통일 추진과 연결해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아데나워: 서방통합과 반공 노선의 대표 인물로, 프랑스와의 화해 및 서유럽 편입을 중시하였다.
할슈타인 원칙: 서독이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는 원칙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비승인 정책이다.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의 대표 인물로, 동독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긴장완화를 추진하였다.
콜 정부: 동방정책을 전면 폐기한 것이 아니라 동서 화해의 흐름 위에서 독일 통일을 현실화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아데나워는 드골과 함께 독일-프랑스 우호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는 프랑스와 서독의 화해를 제도화한 사건이다. 이후 청소년 교류가 본격화되었고 역사화해 협력도 이어졌으므로 선지의 큰 방향은 맞다.

② O
할슈타인 원칙은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승인한 제3국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독의 대동독 비승인 외교를 묻는 대표 개념이므로 옳다.

③ O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동독, 소련,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동방정책을 폐기하다고 천명한 후"이다. 콜 정부는 동방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선언한 뒤 통일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동서 긴장완화와 대화의 성과를 배경으로 통일을 추진하였다. 올바르게는 "콜 정부는 동서 화해의 흐름을 활용하여 동독과의 통일을 이루었다"이다.

오답 포인트

아데나워와 브란트, 콜을 각각 서방통합, 동방정책, 통일의 상징으로만 단편 암기하면 ④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콜의 통일은 동방정책의 폐기가 아니라 그 이후 형성된 대화와 긴장완화의 조건 위에서 가능해졌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독 외교정책 문제는 먼저 인물과 대표 노선을 1대1로 연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아데나워는 서방통합, 브란트는 동방정책, 콜은 통일 완성으로 잡고, 선지에 정책의 폐기나 전면 전환이라는 과장이 들어가면 의심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암기 포인트

아데나워=서방통합, 브란트=동방정책, 콜=통일 완성이다.

NoteBase

문 10. 중동지역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이란-이라크 전쟁
ㄴ. 벨푸어 선언
ㄷ. 욤키푸르 전쟁
ㄹ.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

① ㄴ → ㄷ → ㄱ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ㄷ → ㄴ → ㄱ → ㄹ
④ ㄷ → ㄴ → ㄹ → ㄱ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중동 분쟁 관련 사건의 연도와 선후관계를 묻는 절차·순서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ㄴ. 밸푸어 선언(1917) -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의 민족적 보금자리 건설을 지지한 선언이다.
2. ㄷ. 욤키푸르 전쟁(1973) -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벌어진 제4차 중동전쟁이다.
3. ㄹ.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1978) -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 아래 평화 합의에 이른 사건이다.
4. ㄱ.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 이란 혁명 직후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이다.

왜 이 순서: 밸푸어 선언은 1917년 사건이므로 가장 앞에 오고,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의 뒤에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이 이어지며, 그보다 뒤인 1980년에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 ㄱ을 ㄹ보다 앞에 두었다.
- 이유: 이란-이라크 전쟁은 1980년에 시작하므로 1978년의 캠프데이비드 협정보다 뒤이다.
- 올바르게는: ㄴ → ㄷ → ㄹ → ㄱ이다.

② O
- ㄴ(1917) → ㄷ(1973) → ㄹ(1978) → ㄱ(1980)의 연도 배열이 정확하다.
- 욤키푸르 전쟁 뒤에 캠프데이비드 협정이 오고, 이란-이라크 전쟁은 그 이후에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X
- 틀린 부분: ㄷ을 ㄴ보다 앞에 두었다.
- 이유: 욤키푸르 전쟁은 1973년이고 밸푸어 선언은 1917년이므로 선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 올바르게는: 가장 먼저 오는 사건은 ㄴ이다.

④ X
- 틀린 부분: ㄷ과 ㄴ의 순서를 뒤집었다.
- 이유: 밸푸어 선언이 욤키푸르 전쟁보다 훨씬 이르므로 ㄷ → ㄴ으로 둘 수 없다.
- 올바르게는: ㄴ → ㄷ → ㄹ → ㄱ이다.

오답 포인트

중동 분쟁 사건을 모두 1970년대 전후의 사건으로 뭉뚱그려 기억하면 밸푸어 선언의 1917년 시점을 놓치기 쉽다. 또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전쟁 사건과 같은 시기의 사건으로만 외우면 이란-이라크 전쟁과의 선후관계가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형 문제는 가장 이른 사건과 가장 늦은 사건을 먼저 고정한 뒤 중간 사건의 연도를 끼워 넣으면 빠르게 정리된다. 이 문항에서는 1917년 밸푸어 선언과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먼저 잡으면 정답이 바로 좁혀진다.

암기 포인트

밸푸어 1917 → 욤키푸르 1973 → 캠프데이비드 1978 → 이란-이라크 1980 순서이다.

NoteBase

문 11. 사이버 안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므로 효과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

② 개인 등 비국가 행위자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안보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③ 2013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사이버 전쟁의 교전 수칙으로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을 발간하였다.

④ 사이버 공간의 안보 및 질서 구축에 있어서 미국은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를, 중국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multistakeholderism)를 주장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 특징인 공격 주체 특정의 어려움,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확대, 탈린매뉴얼의 성격, 사이버 거버넌스 모델의 대립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이버 공격의 핵심 난점은 행위자 특정(attribution)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억지와 보복이 쉽지 않다.
비국가 행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낮은 비용으로 국가 안보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탈린매뉴얼은 2013년 공개된 사이버 전쟁의 국제법 적용 지침으로, 시험에서는 NATO 관련 지침서로 묻는 대표 사례이다.
사이버 거버넌스에서는 미국이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중국이 정부간주의를 더 강하게 지지해 왔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므로'이다. 사이버 공격은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책임 귀속이 불명확해지기 쉽다. 올바르게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효과적 보복이 어렵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이다. 오히려 개인, 해커 집단,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안보 문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올바르게는 '비국가 행위자들도 안보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이다.
③ O: 2013년 공개된 탈린매뉴얼은 사이버 전쟁에 국제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리한 대표적 지침서이다. 시험에서는 NATO와 연계된 사이버 안보 규범 형성 사례로 묻는 진술이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뒤바꾼 점이다. 미국은 민간, 기술공동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더 중시하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정부간주의를 더 선호한다. 올바르게는 '미국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중국은 정부간주의를 주장하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탈린매뉴얼 연도와 성격, ④의 미국·중국 거버넌스 입장을 서로 바꿔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사이버 안보에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오히려 오답 가능성이 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이버 안보 문제는 먼저 '행위자 특정이 쉬운가 어려운가', '비국가 행위자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미국과 중국 중 누가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지지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 세 기준만 잡아도 대부분의 선지 OX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사이버는 특정이 어렵고, 비국가 행위자는 강해지며, 미국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 중국은 정부간주의이다.

NoteBase

문 12.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국력 성장이 스파르타에 두려움을 야기하여 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육상 세력인 스파르타와 해양 세력인 아테네 간의 전쟁이었다.

③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는 페르시아를 정복하여 그리스 도시국가의 번영에 기여하였다.

④ 오늘날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기본 사실과 이를 설명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의 핵심 논리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 세력의 부상이 기존 강대국의 공포를 자극해 전쟁 위험을 높이는 구조를 뜻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해상 세력 아테네와 육상 세력 스파르타가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다.
핵심 사실은 스파르타가 전쟁에서 이겼더라도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페르시아의 지원을 활용했다는 점이며, 전쟁 결과도 그리스 도시국가 전체의 약화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성장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가 느낀 공포가 전쟁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선지의 진술은 투키디데스의 대표적 설명과 부합한다.

② O
스파르타는 전통적인 육상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였고, 아테네는 해군력과 해상 제국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삼았다. 전쟁의 기본 구도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스파르타는 페르시아를 정복하여"와 "그리스 도시국가의 번영에 기여하였다"이다. 실제로는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의 자금 지원 등을 활용해 아테네를 꺾었고, 전쟁 후 그리스 세계는 전반적으로 쇠퇴하여 결국 마케도니아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④ O
오늘날 미중 경쟁을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실제로 존재한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경계가 구조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자주 비유로 사용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승전국 스파르타라는 사실에만 기대어 이후 전개까지 강국 서사로 밀어붙인 함정이다. 이 선지는 누가 페르시아를 정복했는지와 전쟁이 그리스 세계에 남긴 결과를 뒤바꾸고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한 뒤 원인, 세력 구도, 전쟁 결과를 분리해서 본다. 원인은 아테네의 성장과 스파르타의 공포이고, 구도는 육상 스파르타 대 해상 아테네이며, 결과는 스파르타의 승리이지만 그리스 세계 전체의 약화라는 흐름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국의 부상과 기존 패권국의 공포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말은 스파르타 승리와 그리스 세계의 약화이다.

NoteBase

문 13. 19세기 조선의 외교적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제너럴셔먼호 사건
ㄴ. 강화도 조약 체결
ㄷ. 조선-미국 수호통상 조약 체결
ㄹ. 갑신정변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ㄱ → ㄹ →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19세기 조선의 주요 대외 사건을 연도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 - 평양 대동강에 침입한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둘러싼 사건이다.
2. 강화도 조약 체결(1876) -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여 조선이 개항한 사건이다.
3. 조선-미국 수호통상 조약 체결(1882) -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미국과의 통상 관계가 열렸다.
4. 갑신정변(1884) -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킨 사건이다.

왜 이 순서: 각 사건의 연도는 1866년, 1876년, 1882년, 1884년이므로 앞 사건이 뒤 사건의 시대적 전제가 된다.

선지 1

O. ㄱ → ㄴ → ㄷ → ㄹ은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 1876년 강화도 조약,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4년 갑신정변의 순서와 일치한다.

선지 2

X. 틀린 부분은 ㄹ과 ㄷ의 선후관계이다. 갑신정변은 1884년이고 조선-미국 수호통상 조약 체결은 1882년이므로, 틀린 표현은 'ㄱ → ㄴ → ㄹ → ㄷ'이고 올바르게는 'ㄱ → ㄴ → ㄷ → ㄹ'이다.

선지 3

X. 틀린 부분은 ㄴ과 ㄱ의 선후관계이다. 제너럴셔먼호 사건은 1866년으로 강화도 조약 1876년보다 10년 먼저 일어났다. 틀린 표현은 'ㄴ → ㄱ → ㄷ → ㄹ'이고 올바르게는 'ㄱ → ㄴ → ㄷ → ㄹ'이다.

NoteBase

선지 4

X. 틀린 부분은 첫 두 사건과 끝 두 사건의 선후관계가 모두 바뀐 점이다. 강화도 조약보다 제너럴셔먼호 사건이 먼저이고, 갑신정변보다 조선-미국 수호통상 조약 체결이 먼저이다. 틀린 표현은 'ㄴ → ㄱ → ㄹ → ㄷ'이고 올바르게는 'ㄱ → ㄴ → ㄷ → ㄹ'이다.

오답 포인트

개항기 사건은 모두 19세기 후반에 몰려 있어 연도가 섞이기 쉽다. 특히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과 1884년 갑신정변,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1876년 강화도 조약의 간격을 혼동하면 순서가 뒤집힌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형 역사 문제는 사건명을 보자마자 먼저 연도를 붙인 뒤 오름차순으로 배열하면 된다. 개항기 조선사는 통상 1866년 대외 충돌, 1876년 개항, 1882년 서양과의 조약, 1884년 개화파 정변의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셔먼 1866 → 강화 1876 → 조미 1882 → 갑신 1884의 흐름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4. 미국 외교정책에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또는 판결이 아닌 것은?

① 미합중국 대 커티스사 판결(United States vs. Curtiss-Wright Export Corporation, 1936)

② 케이스-자블로키법(Case-Zablocki Act of 1972)

③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of 1973)

④ 정보감시법(Intelligence Oversight Act of 1980)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의회의 행정부 통제 장치를 강화한 법률과, 반대로 대통령의 대외권한을 넓게 본 판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의회 보고·감독 강화인지, 대통령의 외교 재량 확대인지의 방향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의회 감독 = 외교·군사·정보 활동에 대해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고 통제를 받도록 하는 장치이다.
Curtiss-Wright 판결 = 외교 분야에서 대통령 권한을 매우 넓게 인정한 대표 판례로 정리된다.

핵심 구분

의회 감독 강화 입법은 행정부의 외교·안보 행위를 보고, 통보, 시한, 위원회 감독의 틀 안에 두려는 방향이다.
반면 미합중국 대 커티스사 판결은 대외관계에서 대통령이 국내정치보다 넓은 재량을 가진다는 논리를 제시한 판례이다.
따라서 케이스-자블로키법, 전쟁권한법, 정보감시법은 의회 통제 강화 쪽이고, 커티스-라이트 판결은 그 반대 방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미합중국 대 커티스사 판결은 외교 분야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재량을 강하게 인정한 판례로 분류된다. 의회의 행정부 감독을 강화한 법률이나 판결로 보기 어렵다.
- 틀린 표현: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판결"
- 올바른 표현: "대외관계에서 대통령 권한을 넓게 인정한 판결"

② O
- 케이스-자블로키법은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협정, 특히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을 의회에 통보·보고하도록 한 입법이다. 따라서 의회의 외교정책 감독을 강화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③ O
-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병력 투입에 대해 의회 보고 의무와 시간 제한을 두어 전쟁 수행 권한을 의회가 통제하려는 입법이다.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와 연결된다.

④ O
- 정보감시법은 정보활동, 특히 비밀활동과 관련하여 의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보고와 감독 체계를 강화한 입법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정보·외교 활동을 의회가 감시하는 장치로 본다.

오답 포인트

①의 판례명을 보고 단순히 외교정책 관련 판례라는 이유만으로 의회 통제 강화 사례로 묶으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외교정책 관련 여부가 아니라 권한이 대통령 쪽으로 기우는지, 의회 감독 쪽으로 기우는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국 외교정책 문제에서 법률명이 나오면 먼저 행정부에 대한 보고·통보·시한·위원회 감독 장치가 있는지 본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의회 통제 강화이다. 반대로 대통령의 고유 외교권한, 단독 재량, sole organ 취지와 연결되면 의회 감독 강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Curtiss-Wright는 대통령 외교권한 확대, Case-Zablocki·War Powers·Intelligence Oversight는 의회 감독 강화이다.

NoteBase

문 15. 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87년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 최초의 ODA 프로그램이다.

② 한국은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5년에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 0.25%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③ 한국의 ODA 정책은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④ 한국의 양자 간 ODA 사업 중 무상협력은 외교부가,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국 ODA의 형성 과정, 규모 목표 달성 여부, 시행 주체, 무상·유상 원조의 주관 부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한국 ODA는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으로 나뉜다. 무상협력은 외교부와 KOICA 축,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와 EDCF 축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한 EDCF는 한국 최초의 ODA 전체가 아니라 유상원조의 본격화 계기이며, ODA 시행에는 중앙부처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 최초의 ODA 프로그램이다"라는 표현이다. EDCF는 1987년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 제공을 위해 조성된 유상원조 기금이지만, 한국의 개발협력은 그 이전의 기술협력·연수생 초청·전문가 파견 등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올바르게는 "EDCF는 한국 유상원조의 본격적 출발점이다"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2015년에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 0.25% 목표를 달성하였다"라는 표현이다. 0.25%는 중기 확대 목표였지만 2015년 실제 ODA/GNI 비율은 그에 미달하였다. 올바르게는 "2015년까지 0.25%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달성하지는 못하였다"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다. 한국 ODA는 중앙정부가 총괄·조정하지만 시행 단계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올바르게는 "중앙부처 외에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한다"이다.
4번: O. 한국의 양자간 ODA에서 무상협력은 외교부가,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다. 실무 집행은 각각 KOICA와 EDCF 축으로 이루어진다.

오답 포인트

EDCF를 "한국 최초 ODA"로 과장하거나, 0.25%를 실제 달성 수치가 아니라 정책 목표였다는 점을 놓치면 틀리기 쉽다. 또한 ODA를 중앙정부 독점 사업으로 이해하면 3번에 흔들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국 ODA 문항은 먼저 무상과 유상을 구분하고, 다음으로 목표와 실적을 구분하며, 마지막으로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무상은 외교부, 유상은 기재부, EDCF는 최초 ODA 전체가 아니라 유상원조의 출발점이다.

NoteBase

문 16. 남북한 간 군비통제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의 실현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김영삼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는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③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④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정상선언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남북한 주요 합의문의 내용과 그것이 체결된 정부 시기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의 기본 틀을 정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문제 협의를 담은 합의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이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도 보유하지 않기로 한 합의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화해협력과 통일방안, 인도적 문제, 경제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상선언이다.
10·4 남북정상선언: 평화체제 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 확대를 구체화한 정상선언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에는 군사적 신뢰조성과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를 협의·추진한다는 취지가 포함된다.
2번: X. 틀린 부분은 "김영삼 정부의"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시기의 남북 합의이다. 다만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내용 자체는 맞다.
3번: O.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방안과 화해협력에 초점을 두었고, 한반도 비핵화나 군축 조항을 직접 포함하지 않았다.
4번: O.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정상선언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오답 포인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은 익숙하지만, 이를 어느 정부 시기의 합의로 볼 것인지에서 많이 흔들린다. 이 문항의 함정은 내용의 진위를 묻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의문과 정부 시기의 연결을 틀리게 섞어 놓은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남북 합의문 문제는 먼저 합의문 이름을 확인하고, 다음에 정부 시기와 핵심 키워드를 짝지어 판단한다. 내용이 맞아 보여도 정부 명칭이나 시기가 바뀌어 있으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합의서=군축 협의, 비핵화 공동선언=핵시설 불보유, 6·15=화해협력, 10·4=국방장관회담이다.

NoteBase

문 17. 19세기 유럽 협조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트레흐트(Utrecht) 조약으로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되었고, 빈(Vienna) 회의에서 협조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② 전승 연합국인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제질서이다.

③ 전승 연합국은 프랑스를 군주제로 복원시키고 강대국 대열로 합류시키는 데 동의하였다.

④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해 세력균형을 도모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19세기 유럽 협조체제의 성립 시기, 전승 4국 중심의 운영 원리, 그리고 관련 조약의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럽 협조체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 회의를 바탕으로 영국·러시아·오스트리아·프로이센이 세력균형과 보수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운영한 국제질서이다.
위트레흐트 조약은 1713년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을 마무리한 조약이므로 나폴레옹 전쟁 종결이나 빈 체제 성립과 연결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부르봉 왕정으로 복고된 뒤 다시 열강 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표현이다. 위트레흐트 조약은 18세기 초의 조약이며, 나폴레옹 전쟁 이후 협조체제는 1814~1815년 빈 회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② O: 유럽 협조체제는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전승 4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전후 국제질서라는 점에서 옳다.
③ O: 전승 4국은 프랑스를 부르봉 왕정으로 복고시키고 이후 프랑스를 열강 질서 안에 다시 포함시켜 유럽 안정에 활용하였으므로 옳다.
④ O: 협조체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다시 유럽의 패권국으로 부상하지 못하도록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성격을 가졌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위트레흐트 조약과 빈 회의를 모두 유럽 질서 재편이라는 큰 틀로만 외우면 ①에 속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조약 이름보다 어느 전쟁 이후의 질서인지를 묻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약이나 회의 이름이 나오면 먼저 시기와 연결된 전쟁을 대조한다. 위트레흐트는 18세기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 빈 체제는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질서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위트레흐트는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 빈 체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세력균형 질서이다.

NoteBase

문 18. 알몬드-리프만(Almond-Lippmann) 컨센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론 변화와 국제상황 변화는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② 일반인은 대외관계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③ 외교 문제에 관한 대중의 태도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④ 외교정책 이슈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알몬드-리프만 컨센서스가 본 대중의 외교 여론의 성격과 외교정책에서의 영향력을 묻는다.

핵심 정리

알몬드-리프만 컨센서스는 일반 대중의 외교 여론이 정보 부족과 낮은 관심 때문에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의견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
핵심은 대중의 외교 태도가 일관성과 응집성이 약하다는 점이며, 그래서 외교정책은 국내 선거 이슈처럼 대중투표에 직접 강하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X. 알몬드-리프만 컨센서스는 여론 변화와 국제상황 변화가 합리적으로 정합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중의 외교 여론은 사건에 따라 급변하고 구조성이 약하다고 본다. 틀린 표현은 '논리적으로 연결된다'이며, 올바르게는 '외교 여론은 국제상황 변화에 따라 일관되게 정렬되지 않을 수 있다'이다.
2번: X. 이 견해는 일반인이 대외관계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소화한다고 보지 않는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낮은 관심이 대중 여론의 불안정성을 낳는다고 본다. 틀린 표현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대외관계 정보는 제한적으로 전달되고 일반 대중은 충분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이다.
3번: O. 알몬드-리프만 컨센서스의 핵심 명제 중 하나는 외교 문제에 관한 대중의 태도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3번은 이 이론의 대표적 설명과 일치한다.
4번: X. 이 견해는 외교정책 이슈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크게 좌우한다고 보지 않는다. 외교정책은 대체로 저관여 영역이어서 선거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틀린 표현은 '큰 영향을 준다'이며, 올바르게는 '외교정책 이슈는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알몬드-리프만 컨센서스를 '국제사건이 생기면 여론도 합리적으로 따라 움직인다'는 설명으로 바꾸면 틀린다. 이 이론의 초점은 대중 여론의 정보 부족, 낮은 관심, 일관성 부족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알몬드-리프만 컨센서스가 보이면 '대중의 외교 여론은 불안정하고 비일관적이며 외교정책에 대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축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알몬드-리프만 컨센서스 = 외교 여론의 비일관성, 저정보, 제한된 선거 영향력이다.

NoteBase

문 19. A국과 B국 간의 갈등을 다음의 치킨 게임으로 설명할 때 A국의 선호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A국 \ B국	양보(C)	대치(D)
양보(C)	CC, CC	CD, DC
대치(D)	DC, CD	DD, DD

※ 득실 칸 각각의 좌측은 A국의 득실, 우측은 B국의 득실임.

① CC > DC > DD > CD

② CC > DC > CD > DD

③ DC > CC > DD > CD

④ DC > CC > CD > DD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치킨 게임에서 한 행위자의 선호순서를 상대의 선택과 결합해 판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치킨 게임은 상대만 양보하면 내가 가장 큰 이익을 얻지만, 둘 다 대치하면 서로에게 가장 나쁜 결과가 되는 갈등 구조이다.

A국 기준으로 DC는 A가 대치하고 B가 양보한 상태이므로 최선이다. CC는 서로 양보해 충돌을 피한 상태이므로 그다음이다. CD는 A가 양보하고 B가 대치한 상태이므로 불리하다. DD는 둘 다 대치해 정면충돌하는 상태이므로 최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국의 선호를 CC > DC로 둔 부분부터 틀리다. 치킨 게임에서 A국은 자신이 대치하고 B국이 양보하는 DC를 가장 선호한다. 또한 DD > CD도 틀리다. 둘 다 대치하는 DD가 A국에게 최악이며, 올바른 순서는 DC > CC > CD > DD이다.

② X
CC > DC가 틀리다. 치킨 게임의 핵심은 상대만 양보하면 내가 최대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A국의 1순위는 DC이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DC > CC > CD > DD이다.

③ X
앞의 DC > CC는 맞지만, DD > CD가 틀리다. 치킨 게임에서는 상호대치인 DD가 충돌 상태라서 최하위이고, A국만 양보한 CD가 그보다 낫다. 올바르게는 DC > CC > CD > DD이다.

④ O
A국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자신은 대치하고 상대는 양보하는 DC이고, 그다음은 상호양보인 CC이다. 그다음은 자신만 양보하는 CD이며, 최악은 상호대치인 DD이므로 DC > CC > CD > DD가 맞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혼동은 DD와 CD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다. 치킨 게임은 둘 다 대치하는 충돌 상황이 최악이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체면 손상인 CD가 불리하더라도 정면충돌인 DD보다는 위에 놓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치킨 게임이 나오면 먼저 최악의 결과가 상호대치 DD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자신이 대치하고 상대가 양보하는 DC를 최선으로 둔다. 남은 두 항목은 상호양보 CC가 자신만 양보하는 CD보다 위에 온다고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치킨 게임의 선호순서는 대치 승리 > 상호양보 > 일방양보 > 상호대치, 즉 DC > CC > CD > DD이다.

NoteBase

문 20. ㉠, ㉡에 들어갈 중국 고전의 개념을 찾고, 이에 해당하는 현대 국제정치의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릇 (㉠)론자들은 제후들이 땅을 떼어 진나라에 바치라고 합니다. ... 이에 신이 대왕을 위해 계책을 올린다면 한, 위, 조, 초, 연, 제 등의 여섯 나라가 (㉡)하여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재상과 장군에게 명을 내려 서로 인질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도록 하십시오. '진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한다면 제와 위 두 나라가 초나라를 돕고, 만일 진나라가 한과 위 두 나라를 공격한다면 제나라는 한과 위 두 나라를 돕고, ...' 여섯 나라가 (㉡)을 행하여 공동으로 진나라에 대항한다면 진나라는 산동의 나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 사마천, 『사기』(소진열전)에서 -

① ㉠: 합종 - 견제(balancing), ㉡: 연횡 - 편승(bandwagoning)

② ㉠: 합종 - 편승, ㉡: 연횡 - 견제

③ ㉠: 연횡 - 견제, ㉡: 합종 - 편승

④ ㉠: 연횡 - 편승, ㉡: 합종 - 견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 전국시대의 합종·연횡을 현대 국제정치의 견제와 편승에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연횡은 각국이 강국인 진과 개별적으로 손잡아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외교 노선으로, 현대 국제정치의 편승에 가깝다.
합종은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강국 진에 공동 대응하는 외교 노선으로, 현대 국제정치의 견제에 가깝다.
편승은 위협적 강대국 쪽에 붙는 전략이고, 견제는 그 강대국에 맞서 반대 연합을 만드는 전략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의 "합종"과 ㉡의 "연횡"이 뒤바뀌었다. 제후들이 땅을 떼어 진나라에 바치자는 쪽은 연횡이고, 여섯 나라가 함께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쪽은 합종이다. 틀린 표현은 ㉠의 "합종", ㉡의 "연횡"이며 올바르게는 "㉠ 연횡-편승, ㉡ 합종-견제"이다.
2번: X. 고전 개념도, 현대 개념도 모두 뒤집혀 있다. 연횡은 강한 진나라 쪽에 붙는 편승이고, 합종은 진나라를 막기 위한 견제이다. 틀린 표현은 "합종-편승, 연횡-견제"이며 올바르게는 "연횡-편승, 합종-견제"이다.
3번: X. ㉠을 연횡, ㉡을 합종으로 본 점은 맞지만 현대 개념 연결이 반대로 되어 있다. 연횡은 견제가 아니라 편승이고, 합종은 편승이 아니라 견제이다. 틀린 표현은 ㉠의 "견제"와 ㉡의 "편승"이며 올바르게는 "㉠ 연횡-편승, ㉡ 합종-견제"이다.
4번: O. ㉠은 진나라에 붙어 이익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연횡이므로 편승에 해당하고, ㉡은 여섯 나라가 공동으로 진나라를 막으려는 합종이므로 견제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합종과 연횡을 한자 뜻만 보고 외우면 쉽게 뒤섞인다. 이 문항은 고전 개념 이름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강자 편입인지, 강자 견제 연합인지를 현대 개념까지 함께 맞춰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약소국이 강대국 쪽에 붙는지, 여러 나라가 연합해 강대국에 맞서는지를 구분한다. 강자 쪽에 붙으면 연횡-편승, 강자에 공동 대항하면 합종-견제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연횡은 진과 손잡는 편승, 합종은 여섯 나라가 뭉치는 견제이다.

NoteBase